

# 영산강 수질 개선에 663억 투입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오는 15일 발표하는 '지방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키에 따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의 '4대 강 정비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정비 사업의 전망에 대해 조명해 본다.

◇추진 배경=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지방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킨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4대 강 정비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 ■ '4대 강 정비' 지방 발전대책 포함

### 일자리 2만6천개 창출·생산유발 효과 2조7천억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4대 강 정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2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4대 강이 호남과 영남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을 완화하겠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듯 하다.

전남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 뱃길 복원에 적극적인 입장인 만큼 '4대 강 정비 사업'을 지방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야권에서는 정부의 4대 강 정비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예산 삭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가 우선 수질 개선과 경기 부양 등을 명분으로 4대 강 정비 사업을 펼친 다음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4대 강 정비 사업 예산이 기존의 치수사업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뱃길 복원 및 뱃길 잇기라는 명분으로 4대 강 정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야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 심의에서 '4대 강 정비 사업 예산'은 일부가 삭감된 채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긍정적인 여론을 유도 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4대 강 정비 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낙동강에 4천469억원, 영산강 663억원, 금강 1천800억원, 한강 648억원 등을 배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노-박-정 '삼각 커넥션' 각개격파?

〈건평〉 〈연차〉 〈대근〉

## 檢, 세종證 의혹·휴켄스 혈값 매입 수사 대질신문 등 배제...입 맞추기 사전 차단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3인방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의혹을 '각개격파'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세종캐피탈을 압수수색하고 김형진 회장과 홍기욱 사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울렸다.

검찰은 이후 홍 사장이 정 전 회장에게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 하도록 힘써달라'며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밝혀내 정 전 회장을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를 체포해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하고 함께 30억원을 받았다 는 진술을 얻어내 노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했다.

노씨는 "현금 3억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돈을 받은 횡수와

장소도 정씨 형제의 진술과 엇갈리고 있지만 검찰은 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오전부터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서도 정 전 회장이나 노씨와의 대질신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과 농협의 자회사인 휴켄스와 남해화학을 혈값에 인수하고자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씨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박 회장이 노씨나 정 전 회장 뒤편에 주식투자자를 하지 않았는지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질 신문은 통해 사건 경과를 조목조목 캐묻는다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이 엇갈릴 테고 그동안 하

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검찰로서는 시도해볼 만하다.

검찰은 그러나 피의자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서로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대질신문 과정에서 굉장한 치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자리에 앉혀 놓으면 뒤늦게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는 게임이론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를 검찰이 활용하면서 커넥션의 약한 고리를 끊는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씨는 '독방'(독거 거실)을 배정했고 정 전 회장은 현대차 비물 사건으로 이장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 성동구치소로 이감돼 서로 마주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씨보다 먼저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홍 사장과 정씨 형제도 각각 다른 건물의 8인실, 6인실을 배정받아 구치소에서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4대강 정비 = 변형된 대운하?' 논란 증폭

## 野 "대운하 사전 포석...예산 줄여야" 韓 총리 "대운하 연계 절대 아니다"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해 야권이 10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이날 오후 발기한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4대 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며 치수, 수질 개선, 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인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정부 측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오는

대로 심사를 재개기로 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예뻐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와 연계된 것을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에 출연, "(4대강) 치수사업은 수원지 확보 및 환경 정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낮 청와대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 국가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위기는 기회... 국민통합·포용 나서라"

## 국가 원로들, 李 대통령에 위기극복 '훈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문화·종교계 인사 등 각계 국가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최근의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조언을 들었다.

오찬을 겸해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다. 특히 연말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연출되고 있는 정치권의 대결 국면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건배사를 겸한 인사말에서 "은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국회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거에 국회에 몰랐던 사람의 한 명으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원기 전 의장도 "30년 정치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전투적 대결 정치는 정 말 곤란하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런

위기가 작은 갈등을 접고 위기 극복에 단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보쪽에서는 보수 진영이 이뤄낸 산업화의 공을 인정해야 하고 보수쪽에서는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틀을 만들어낸 진보 진영의 공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불교계 원로 월주 스님은 "당내 통합과 거국적 통합에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현승종 전 총리는 "국민이 여당에 많은 의식을 준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國鳥를 鶴으로" 운동본부 발대

## 박재순 최고 "전세계 학 25% 우리나라 찾아"

우리나라의 국조를 학으로 지정하자는 범국민운동 발대식이 10일 전국 기초단체장 30여명으로 구성된 학학회(학과 소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국조선정범국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국회에

서 열렸다.

학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국화로 무궁화가 통용되고 있는데 헌정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없었던 국조를 이명박 정부가 지정해야



한다"며 "매년 전 세계 학의 4분의 1이 우리나라를 찾는 만큼 학을 국조로 지정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가수 박효신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대한민국 국조 선정을 통한 문화·생태·외교 콘텐츠 활용방안'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

/연합뉴스

#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강학선연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p><b>김영태</b> 교수 연세대학교</p>	<p><b>홍사연</b> 교수 포항공과대학교</p>	<p><b>유기하</b> 원 한양대학교</p>
<p><b>임마출</b> 원 한양대학교</p>	<p><b>인이동</b> 원 한양대학교</p>	<p><b>박정호</b> 원 한양대학교</p>

또 수업을 들었던 예비 대학원생  
다들 물어봐서... (이런) 친구들  
●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학부생)  
● 대학원 대학 원생이십

**기간** 1월 2일

기본개념 (1박 2일)

# MDPass 醫學원

**263-5453**      **255-9119**

북구정 맞은편      전북대 병원 앞

**서울고시학원**      514-4560

www.sggos.com